

2018년 2월 농촌 현장의 소리



※ 문의: 미래정책연구실 조사동향팀 송성환, 김미리(061-820-2325, 2159)

본 자료는 연구원이 전국 시군의 농업경영인 1명씩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KREI리porter'가 보내온 농촌 현장여론과 정책제언입니다.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전달한다는 취지로 가감 없이 요지만 정리하였으며, 연구와 정책수립에 활용되길 바랍니다.<편집자 주>

□ 개요

- 수집기간: 2018. 2. 1. ~ 2. 27.(총 20건)
- 수집대상: KREI리porter
- 수집방법: 온라인사이트, 이메일, 팩스, 우편, 지역간담회

□ 농촌 다문화 가족 및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적응 실태와 개선 과제

귀농·귀촌 지원대상의 적정성을 판단, 무분별한 자금지원은 지양해야

- 고령화, 저출산 등 농촌인구의 급감에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도시민의 귀농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음. 농촌에 잘 적응해 살면서 지역주민과 화합해 시너지를 내고 농가소득을 올리는 사람도 많지만 농촌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떠나는 귀농인도 많은 실정임. 값싼 농산물 가격으로 도시에 비해 턱없이 낮은 소득과 치솟는 인건비, 부족한 영농지식으로 한번 실패한 후 회복이 어려운 농업의 특성, 지역주민과의 갈등 등 다양한 요인이 귀농의 실패를 야기하고 있음. 귀농에 앞서 기초 영농교육이 필수이며 농촌에 대한 이해와 농업 관련 적성검사를 통해 통과한 사람에게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여 유입을 위한 무분별한 자금 지원은 지양해야 할 것임.<최○○, 충남>
- 귀촌인은 퇴직하고 나서 농촌으로 들어와 텃밭 형식의 조그마한 밭을 일구어 농촌에서 소소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라 귀농인과는 다르다고 생각함. 귀농과 귀촌은 정책적으로 달리 운영되어야 마땅할 것임. 우리농장에서 귀농교육을 진행하는데, 교육생들에게 귀농지원금은 언제 받아도 받을 수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좀 더 배운 뒤에 받으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아직까지도 정부지원금만 바라고 귀농귀촌을 희망하

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임. 하루 사이에도 수십 번 달라지는 것이 농사일인데, 쉽게 되지 않는다며 금세 농업을 포기해 지원금을 빚으로 떠안는 사례가 종종 있어 우려가 됨. 지원만 바라는 귀농·귀촌이라면 신중히 생각해 도전해야 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진 진정성 있는 귀농인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함.<김○○, 경기>

성공적인 귀농·귀촌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교육과 서로 간 화합의 노력이 중요

- 귀농·귀촌 교육을 듣고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귀농·귀촌만으로 자금 지원, 시설 보조, 저리 대출 등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음. 농촌의 현실성과 크게 떨어진 내용임. 귀농·귀촌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누구라도 성공하는 것은 아니란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 간혹 전문직에 있다가 귀농해 오시는 분들이 농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농촌에서는 지역에서 함께 융화되어 초보라는 생각을 갖고 배워가는 자세로 일할 수 있는 사람만 귀농해야 할 것임.<임○○, 충북>
- 2011년 받은 귀농·귀촌 교육을 시작으로 현재 영농 8년차 감귤나무를 재배하고 있음. 첫째는 일반 월급쟁이보다 못한 소득에 크게 실망했었지만 기초적인 재배기술이 부족했던 탓이었다고 생각해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원 등 재배기술을 배우고, 전문가에게 재배방식 등에 대해 지문을 구하기도 했음. 귀농인들과 품앗이하거나 연구회도 만들어 활동했고 경험이 쌓이니 무엇보다 농사는 경험과 몸으로 느끼는 감각이 중요하다는 것도 깨달았음. 귀농으로 인해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귀농인이 마을의 오랜 관습이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해 생기는 것이라 생각함. 원주민 입장에서는 귀농지원이 오히려 역차별이란 시선도 적지 않음.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서로 간 노력도 필요하지만 지자체에서 원주민과 귀농인이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임.<현○○, 제주>
- 농촌에 산다는 것은 개인의 귀농·귀촌 여건이나 소득, 지역주민의 구성과 영농형태, 관습 등에 따라 적응 실태도 다양할 것임. 농촌은 농업외 특정 수입원이 없고 농업은 고된 육체노동을 필요로 하면서도 적정한 소득을 올릴 수 없어 어려움이 많음. 최소한 투자 자본을 보장할 수 있는 작목을 개발해 비전을 제시하고 귀농·귀촌으로 새로운 농촌의 활력소를 만들도록 농자재나 시설 지원, 농촌복지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김○○, 경기>

다문화 가족 '의사소통' 이 가장 큰 문제...언어·문화 교육이 시급

- 농촌의 다문화 가족은 대개 나이가 있는 남성들이 결혼을 목적으로 외국여성을 데려와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실질적으로 다문화 가족이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제도가 많지 않으며 심지어는 몇 해가 지나도 우리말을 잘 못하거나 혹은 살다가 도망가는 사람들도 적잖이 있었음. 개인이 단순히 결혼을 목적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라 해도 정책적으로 언어 교육, 창업 지원, 각종 시설지원 등을 체계화해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함. 말이 통하지 않으면 취업해도 단순노동 혹은 3D업종에 종사하게 되는데, 체계적으로 다문화 가족 지원 및 관리, 교육 시스템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함.<김○○, 전남>
- 농촌에서는 여럿 다문화 가족이 말이 통하지 않아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것이 큰 고민임. 이들도 돈을 벌기위해 취업하는데, 말이 통하지 않으니 하는 수 없이 단순한 일만 하게 되어 고용주의 인력 활용 면에서나 근로자의 소득 면에서나 언어가 큰 걸림돌이 됨. 다문화 가족의 언어교육이 가장 시급함.<도○○, 충남>
- 다문화 가족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어를 배우지 않아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는 것임. 마을단위로 다문화 가족의 언어 및 문화교육을 실시하여 주변 사람들과 친분도 쌓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면 좋겠음.<김○○, 경남>

다문화 가족에 대한 선입견 없애고 정착지원금 제도 마련 등 적응여건 만들어줘야

- 현재 우리 농촌의 현실을 감안할 때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의 수용(고용)은 필연적이라 생각함. 특히 농산물 가공업체의 경우 많은 수작업을 필요로 해 일손부족이 심각한 실정인데, 우리나라 여성은 힘든 일을 꺼려해 대부분 중국이나 베트남 여성을 시간제로 고용해 활용하고 있음. 우리 사회 전체가 이제는 단일 민족이 아니라 다문화의 글로벌 시대에 살아야만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그들을 따뜻하게 배려하고 위해주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함. 이들이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언어 등 교육이나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면 좋겠음.<임○○, 경기>
- 고령화되어 생산능력이 도태된 농촌 현장에는 그나마 외국인 근로자나 한국으로 시집온 다문화 가족들이 일해주고 있기 때문에 1차 산업을 버텨주고 있는 실정임.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대견하고 고마운 존재로 여겨질 수밖에 없음. 외국인 근로자들

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국으로 돌아갈 여지가 있다지만 결혼하여 온 다문화 여성들에겐 한국에 정착하는 것이 큰 과제이며 이것은 그들만의 노력이 아닌 제도적으로 도와줘야 가능할 것이라 생각함. 우리도 다문화 가족들이 자라온 문화와 풍습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이들을 농촌의 사업자로서 동반자라는 인식으로 선입견을 없애는 것이 중요할 것임.<이○○, 경기>

- 우리 지역은 외국인이 많은 편은 아니나 몇몇 다문화 가족은 결혼 이주여성이 대부분임. 농장 일도 돕고 아이 낳고 잘 살고자 노력하는데, 워낙 소득이 적기 때문에 자녀 양육과 부모 봉양에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 가정이 많은 것이 현실임. 청년 영농정착지원금처럼 이들에게도 우리나라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 제도를 마련해주면 좋겠음. 외국인에게 쓸데없이 돈을 낭비 하나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겠으나, 이들도 엄연히 우리 농촌에서 가정을 이루며 사는 귀농·귀촌인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이 낳은 자녀들도 엄연한 우리 국민이기에 다문화 가족을 한민족으로 여기며 돕고 사는 것이 당연할 것임. 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함.<정○○, 대전>

□ 기타 농업·농촌 현장여론

- 기본적인 백신 외에는 일체 약을 사용하지 않고 넓은 산간지대에서 방목해 친환경 양계업을 25년째 하고 있음. 축산계열화 사업이후 부화, 도계 등의 기반사업을 대기업이 독점하게 되면서 소비자 수요가 있어도 도계를 할 수 없게 되었고, 부화나 도계를 하려면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마저 시설이 부족해 생산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실정임. 정부는 가축질병의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복지축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닭을 신고 먼 길을 나가야만 도계할 수 있고 밀식 사육을 해야 그나마 생산비를 줄여 이익이 나는 현 구조와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 아닌가 싶음. 현실에 맞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송○○, 강원>
- 기상예보에 의하면 올 봄에도 심각한 가뭄이 예상된다고 함. 해마다 가뭄은 계속되는데 소홀한 대응으로 항상 문제가 되고 있음. 관정 설치 및 보수, 물 가두기, 가뭄피해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가뭄 대비책을 조기에 수립하고 조치해주어야 할 것임. 지금부터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가뭄대책을 미리 검토해주시기 바람.<최○○, 충남>